

자주통일의 길

조국광복60년, 4월혁명45주년 논집 2005

- 발행처 : 사월혁명회
- 발행일 : 2005년 4월 15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6.15시대 통일운동의 발전과 과제

- 주 제 : 1. 6.15공동선언 이후 통일운동의 발전과 현황
- 2. 통일애국세력의 단합 및 확대강화 방안
- 3. '공준위' 출범과 통일운동의 과제

■ 일 시 : 2005년 3월 23일(수) 오후 3~6시

■ 장 소 : 사월혁명회 사무실

- 토론자 : 김승교(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공동대표)
- 김종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
- 김창현(민주노동당 사무총장)
- 박세길(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조직위원장)
- 이경원(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

■ 사 회 : 황 건(사월혁명회 공동의장)

6.15공동선언 이후 통일운동의 발전과 현황

황 건 : 반갑습니다.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종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매년 광복절, 6.15행사 외에도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 등 부문별 행사와 각종 체육행사를 매개로 연간 수천 명이 남북을 오가며 통일염원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남북간 도로가 연결되고 개성공단이 비록 체동이 걸려 있기는 하지만 정상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체제언론의 여론조사에서조차도 자주통일을 지지하고 자주국방, 미군철수를 선호하는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5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경천동지할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사태는 아직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패권주의의 등쌀로 6자회담이 수렁에 빠져 남북의 당국간 대화는 동결되어 있고 수구세력과 조중동의 히스테리는 여전합니다. 승미집회 참가자들이 성조기를 앞세우고 청와대로 행진하는 해프닝이 계속되고 있고, 국보법은 여전히 통일운동에 족쇄를 채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여전히 북미 대화를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북에 대한 선제공격연습을 자행하는 등으로 남북의 화해협력에 제동을 걸면서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스를 수 없는 대세는 바로 지금은 ‘6.15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6.15정신’은 민족의 든든한 이정표로서 남녘의 대중들간에 확고한 대세를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먼저 지난 5년 동안 통일운동이 어떻게 발전하여 현재 어떤 상태에 와 있는가, 통일운동이나 통일운동체의 현 주소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나다순으로 말씀을 열도록 하지요.

김승교 :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저 외에 다섯 분은 아마도 20여 년 이상 통일운동의 최전두에 서서 전업해서 활동해 오신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점에서도 여러 선배들과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다는 게 좀 주제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20여 년 동안 한결같이 헌신해 온 분들이 작금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거라 생각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주요한 책임이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분들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선배님들이 더 잘 느끼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6.15공동선언이 있는 지 5년 동안에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냉전의식 특히 북에 대한 인식, 또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미국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정말로 현격하게 변화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변화가 우리 통일운동의 전망, 민권운동의 전망을 아주 밝게 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국민의식 변화의 촉매 기반이 된 게 바로 6.15공동선언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쉬운 대목은 가끔 집회에 나가 보면 참 안타까운 게 깃발은 무수한데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선언 이후 통일관련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대단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통일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활발해지고 있다는 반증임과 아울러서 역설적으로는 복잡성을 노정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여전히 통일운동단체 통일운동가들의 대중에 대한 영향력, 지도력이 아직까지도 극복해야 할 과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국민들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고 그것이 운동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운동가들, 통일운동단체들이 아직까지도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 지도, 반영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극복해야 될 아쉬움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일 : 저는 김승교 변호사님의 말씀에 대체로 동의하므로 반복은 생략하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단적으로 6.15공동선언으로 금단의 영역이 무너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 땅 바다 모든 게 열려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금강산 관광을 다녀오고, 정부 차원에서 장관급 장성급 회담도 추진되고 다양한 교류사업도 추진되고 있어 그런 면에서 통일에 대한 객관적 정세는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통일을 구현해 간다는 것은 민족역량이 단합해서 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일 텐데 다방면에 걸쳐서 폭넓은 교류가 객관적으로 국민의 의식을 전변시킬 만큼 변화는 있었지만, 그러나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만드는 데까지 나아갔느냐 하면 저는 그러한 점에선 대단히 부족했다고 봐요. 그것은 단적으로 아무리 다양한 폭넓은 민간교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정치군사적인 통일의 근본적 걸림돌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환적 국면들이 열리지 않는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저는 민간 자주적 통일운동 진영이, 대표적으로 통일연대가 정부와의 관계에서, 또 종단 민화협과 관련해서 좀 더 자기 자주성을 명확히 견지해 나가는 데서 지도력이 취약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김창현 :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6.15공동선언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이 민주노동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6.15공동선언이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김종일 사무처장의 지적처럼 금단의 성역을 없애버렸고, 또 김승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의식 속에 있던 반공·반북이데올로기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틈바구니를 뚫고서 진보정당이... 그것도 노동당이란 이름을 가지고 제도권 내로 의석을 갖는 정당으로 등장하여 수십 년간 막혀 왔던 물꼬를 트게 하는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노당의 성장은 여러 가지 노동운동, 농민운동의 성장에 힘입은 바 크지만 6.15 공동선언이 갖는 생명력이 거기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6.15공동선언 이전과 이후의 통일운동이나 대중운동을 비교한다면 그전에는 주로 대중적으로 통일운동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목적의식적인 선도투쟁이 아무래도 많았고 북을 방북하는 사람도 사실상 장기형을 각오하고 선도적으로 뚫고 나가고, 특히 통일운동은 통일에 반대하는 정부에 대한 반정부 통일운동이라는 성격이 강했고 또 미국에 대한 문제제기도 역시 선도적인 방식이었다면, 6.15 공동선언 이후는 그런 운동이 상당히 대중화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일운동단체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동하는 사람들 간에 6.15공동선언의 정신처럼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것이 시대의 대세가 되었고 반미문제에 있어서도 물론 효순이 미선이 투쟁이 분수령이 되지만 광범위한 반미자주의식이 대중적으로 확산되게 되었다고 봅니다.

오늘날 통일운동의 현주소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정치군사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계가 있다고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덧붙인다면 우리 통일운동을 하는 주체들이 열려진 공간 속에서 자주적 교류사업에 더 친착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반성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격스러워 그랬겠지만 북에 가서 다방면으로 교류하는 사업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다면 역으로 전국적 차원의 자주권을 회복하는 문제로 통일을 바라보고 이를 가로막는 미국에 대해서 보다 강하게 비판하고 공격하는 데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문제, 군축의 문제, 미군의 단계적 철수 문제, 소파(SOFA), 한미동맹의 개정문제...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끌어내면서 싸워야 하는데 실제로 싸워온 측면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평양에 가는 문제, 교류하는 문제, 각계각층이 서로 교류하고 물꼬를 트는 문제... 이런 쪽에 들이는 관심과 힘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반성 속에서 우리 당도 구체적으로 남측에서 해야 할 과제를 분명히 하고 통일은 단순히 통일을 부르짖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제를 제대로 시행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박세길 : 6.15공동선언은 이전 시대와 이후를 구별짓는 역사적 경계선이라고 감히 평가를 해봅니다. 6.15공동선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친미와 반북이 서로 맞물려서 상승, 서로가 서로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시대였다고 한다면 6.15공동선언이 나오면서부터는 거꾸로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이 서로 맞물려서 상승 발전하는 그러한 질적인 전환 국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달라진 국면에서 통일운동이 합법화, 대중화하여 각계각층에서 아주 폭발적인 비약적인 성장과정을 거쳐 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던져진 두 가지 과제는 앞서 김창현 총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난 5년 동안은 자주 교류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던바 말하자면 마주보고 다가서는 그런 과정에 치중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손잡고 나가는 즉 자주의 길을 함께 개척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이 전환이 제때 힘 있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깊이 되돌아 봐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통일운동이 합법화 대중화 각계각층화된 단계에서는 궁극적으로 전 민족 구성원이 통일운동의 주인,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

자면 통일된 세상 속에서 각자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좀 더 명료한 전망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통일운동진영은 이 점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 사람 한사람이 통일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자기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뚜렷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내용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를테면 연방통일 쪽으로 가져간다면 그 하부토대로서 통일민족경제론이 아주 생생하게 마치 영상처럼 다가서야 되는데 그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는 거 같거든요. 이런 과제를 좀 조속히 해결해서 모두가 다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새롭게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경원 : 지금 6.15공동선언이 가져온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들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표현이 ‘바다길 땅길 하늘길’이 열렸다는 것이 남북 사이의 관계이고 보면 그로부터 금강산, 개성공단 등 여러 가지 교류가 활발해졌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의 인식, 생각이 많이 변했다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우선 누구든지 북에 가보고 싶어 한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죠. 이것은 반공이데올로기가 깨졌다는 반증이라고 봐야 합니다.

남측 운동에서 공동선언 발표가 있는 이후 몇 가지 대중적 열기가 획기적으로 분출했다고 보여지는데 하나는 매항리 투쟁에서부터 폭발한 반미투쟁의 활성화 이것이 결국은 여중생투쟁으로 분출했다고 보고, 또 하나는 ‘붉은 악마’로 표현되는 월드컵에서의 대중들의 열기도 달라진 사회현상 속에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탄핵문제에서 비롯된 대중들의 분출 열기가 반한나라당 또는 수구 냉전세력을 교체시켜 나가는 이런 쪽으로 발전했다고 보여집니다.

통일운동 차원에서는 4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추진본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상적인 통일운동을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로부터 이번에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는 것 자체가 통일운동의 획기적 발전이라고 봅니다. 또 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여성을 비롯한 부문들의 남북간 연대연합이 대단히 활기있게 발전해 오다가 공동선언 5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공동행사준비위원회 안에서 각 부문별 본부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발전한 것도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좀 안타까운 것은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공동선언 5년이 되기까지 여전히 정치군사적 또는 정치적 투쟁이 질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데는 정세 요구에 비해 대단히 늦은 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이 부문에서는 우리가

정세의 요구에 발 빠르게 부응하지 못했고 그리고 공동선언을 관철해 나가자고 하는 민족적 요구에서 볼 때 속도감이 많이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죠. 앞으로 정치투쟁의 활성화, 그리고 민족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좀 더 빠르게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치적 투쟁을 어떻게 힘있게 해 나가느냐가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는 문제

황 건 : 지금까지 6.15공동선언 이후 통일운동의 현주소를 짚어주셨는데, 6.15 공동선언의 실천은 기본적으로 7.4공동성명이 제기한 대로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할 것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운동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자는 명제는 전략적 또는 강령적인 명제인가, 아니면 전술적 또는 편법 차원의 과제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강령적인 명제라고 한다면 남측의 통일운동체들이 과연 이 명제에 충실했다고 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통일연대 차원에서 외형상 민화협, 종단과 비교적 원활하게 공동보조를 취해 왔고, 또 최근에 남북해외 공준위가 발족하여 통일운동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지만, 우리 통일운동은 남북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남측 내부 차원에서도 정말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야 하는가, 또 허심탄회하게 초월할 태세가 되어 있는가, 관념적이 아니라 현실적, 실천적으로도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 연합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둘째, 통일운동이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는 실천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본의 횡포에 시달리는 남측의 노동자 농민과의 마찰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나라당이든 어떠냐 통일을 위해 뭉쳐나갈 수 있는 모든 세력과 다 같이 가야 한다, 지금은 계급문제 따질 때가 아니다, 라고 말들을 하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문제란 말이에요. 개인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각 단체가 저마다 강령을 가지고 있고 목표가 있는데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 명제를 수용하고 있습니까?

이경원 : 문제를 좀 나눠서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개략적으로 보면 저는 우선적으로 6.15공동선언 이행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된다, 즉 6.15공동선언은 통일이나 반통일이나를 가르는 잣대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국통일을 이루어나가는 데서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공동선언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은 함께 해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라는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측면은 남과 북의 다른 체제,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자본주의적 또는 사회주의적 체제, 거기서 요구되어지는 사상,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한 측면은 각 단체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서 공동선언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저는 조국통일운동에서 요구되는 사상과 이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민족대단결을 이야기할 때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을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 이념적 문제로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을 이야기한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조국통일운동, 즉 전체 민족이 단합하는 데서 요구되어지는 하나의 이념적 문제입니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고 하는 데서 민족대단결은 하나의 사상적 문제, '민족대단결 사상'이라고 할 정도의 사상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거구요. 그리고 공동선언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민족끼리 통일하자'는 것도 이념적 문제이고 '우리민족 제일주의'적 정신도 하나의 이념적 문제로 놓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상과 이념 제도 재산의 유무 종교의 차이를 다 뛰어넘어서 단결하자는 데는 조국통일이라고 하는 민족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여기에 보조를 맞춰나가는 방향에서, 그러면서도 조국통일 대단결을 실현해 나가는 방향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놓고 우리가 단결할 거냐에서 요구되어지는 또 한 가지 이념이 있다... 이것이 부정된다면 이걸 좀 다른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공동선언에 동의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와 결부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황 건 : 그런데 남쪽 내부에서 이 논리를 관철할 경우 당장 노동운동하고 마찰이 생길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노동자, 농민들에게 민족논리를 설명, 설득하기란 사실 힘든 문제라고 봅니다.

김창현 : 실제로 그 문제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늘 부딪히고 있어 많이 고심하는 문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주노동당에는 아주 참 다종다기한 정파가, 많게는 열

개 이상의 정파가 있다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 운동권은 다 모였다고 하는데요.

크게 보면 우리가 6.15남북공동선언이라는 표현 자체를 최근에 와서야 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나 하면 지난번 당 지도부는 6.15남북공동선언을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6.15공동선언 정신을 살리는 데 당이 앞장서자는 표현을 사업목표에 넣지를 못했어요. 6.15공동선언에 대한 평가가 극단으로 갈렸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IMF 사태를 맞고 신자유주의 체제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김대중 정부가 IMF 전도사라 할 정도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성실히 실행했기 때문에 노동운동 내부로 봐서는 김대중 정부는 가장 반노동자적 정부였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쫓겨 나갔죠. 그러한 것들이 98, 99년도에 가장 극심하게 이루어진 가운데 2000년 6.15선언이 나올 때 노동운동 일각에서는 민중의 분노를 통일로 돌리기 위한 알뜰한 술책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6.15공동선언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을 가했는데 워낙 전 민중적으로 국민들의 환영을 받으니까 내놓고 공격은 못하고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현상이 2001, 2002년에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당 지도부가 6.15공동선언의 실현에 대한 적극성을 띠기가 사실 좀 쉽지 않죠. 당내에 다양한 입장이 있고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업목표에 넣기가 힘든데, 요즘에는 그런 면에서는 많이 나아진 거죠.

지금은 우리 당의 1년 사업목표를 세울 때 6.15공동선언 실현을 당의 중요한 사업목표로 세우는 데 큰 이견 없이 가고 있고, 지난 번 대선 이후 당의 큰 사업 두 축이 소위 평등과 자주라고 해서 이제 체제적 모순과 민족적 모순을 다 추구하는 당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상과 이념 제도를 초월하지는 명제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진 않으나, 당면해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 농민들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면 악덕자본--주로 재벌들이 될 건데--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 대의원대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업목표 중 자주통일사업에 대해 그런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체로 우리는 “두 가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통일은 전 민족적 과제이니 통일을 지향하는 모두 세력들이 함께 통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반면에 우리 내부에서 벌어지는 제도적인 모순, 내부적 갈등과 투쟁에 대해서는 그것과 별개로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나 농산물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다, 바로 반정부투쟁으로 나간다고 정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통일운동이나 자주통일사업은 그러한 잣대로만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 차원이 다른 강령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아마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올 때는 역시 갈등이 생길 겁니다. 예를 들어 구조조정문제로 한참 비정규직 투쟁을 벌이고 있을 때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노무현 정권 타도하자’ 그러다가 ‘잘 갔다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한 사람이 한 입 갖고 두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 현실 아니냐, 그렇게 가야 한다고 이렇게 당내에서 정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세길 :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같은 민족이 대단결하자, 이거 언뜻 들으면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차이 같은 것 대충 무시하고 갑시다, 하는 어떻게 보면 맹충맹충한 그런 얘기로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날카로운 혁명적 자기변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민족적 대단결을 실현한다는 것은 그 내용 속에 불가피하게 남쪽 입장에서 보서는 북의 사회적 진화 발전을 용인하고 다 같이 협력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반대하고 북의 어떤 사회 제도나 선택을 반대하면 사상 제도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 단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거꾸로 북의 입장에서는 자본시장경제와 소통하면서 자체의 변화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것은 공허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북의 경우, 오늘 여기에서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2002년 7.2 경제개선 조치는 자본시장경제와 소통하면서도 사회주의적 발전을 고수하는 독특한 나름대로 새로운 제도 방안들을 내놓고 그것을 지금 실행하는 단계에 있는데, 남쪽 입장에서 북의 사회조치나 발전을 용인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지 협력하려면 지금의 이 신자유주의 기초, 사회제도에서는 어차피 불가능한 얘기에요. 가능하다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 임시적으로밖에 되지 않고 전면적인 통일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는 근본적인 흠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체 혁명적 변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슬로건을 현실 속에서 전면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제도의 문제에 접근할 때는 대단히 강력한 과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대단히 날카롭게 인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더붙어서 같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종일 : 7.4공동성명의 평화통일 3대원칙이 나올 당시는 남과 북이 한국전쟁을 겪고 한 20년이 지나 사회체제나 여러 가지 사회적 기반이 완전히 달라진 때인데, 그러나 민족구성원이라면 공동의 요구인 통일에 대한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질적 요소가 많은 상황에서 통일이라고 하는 민족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방향과 기조로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7.4공동성명이 그 원칙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주적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란 걸 훑어보면 결국은 우리가 그런 이질적 요소를 가지고서도 어쨌든 통일하기 위해선 연방제 통일로 가야 한다, 그래야 상호 이질적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통일을 할 수 있다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를 원칙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려면 민족대단결 사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남측의 계급문제 갈등 때문에 노동계급이 통일운동의 전면에 나서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김창현 사무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노동자, 농민을 비롯해서 어쨌든 자본가계급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자본가든 생산계급이든 전면적 대단결 사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민족대단결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우선 민족자주사상을 가져야 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어제까지 민족의 반역질을 했더라도 오늘은 통일운동에 진심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자본가들이 현재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경제교류를 하는 거냐 하면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본가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최대한 이윤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서 자본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로 본다면 우리가 무차별적으로 사상 이념 체도를 뛰어넘어서 다 같이 하자라는 게 아니고 그냥 물계급적 단합을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백한 차이가 있는데, 진짜 차이가 있는데 이걸 올바른 사상에 입각해서 통일시켜 내기 위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민족적 자주통일운동의 실천적 과제로 제기된다고 봅니다. 불가피하게 아직 그런 단계로까지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과도기적, 현실적 문제로 나서긴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통일운동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 둘씩 극복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노동자 민중 전체가 주인답게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통일된 세상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한다면, 연방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1국가 2체제 통일을 상정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이 전제되기는 하지만 연방제는 그러면서도 명백히 통일이라고 느껴진다는 것이고, 남북간에 이질적 요소가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민중들 스스로가 내부적 요소를 극복해나가는 운동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래야만 민중이 주도하는 단일한 체제로 하나의 흐름으로 발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민중들 스스로가 선택해야 할

시대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세길 : 저는 이미 노동운동이든 농민운동이든 이 문제에 관해서 대단히 광범위한 수준에서 합의가 정리되어가는 추세라고 보는데, 결정적인 요인은 어쨌든 97년 외환위기 이후 모든 문제의 근본이 미국과의 모순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각성하면서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해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전 민족이 단합된 힘으로 이에 대항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머리 속에 자리잡게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은 비록 정부당국이든 재벌들에 의해서라도 어쨌든 민족단합의 길이 열리고 있지만 그것이 곧 우리 자신의 이익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상당히 열려진, 좀 더 진전된 사고를 하는 것이 최근에 보여지는 발전적 모습이라 보여지고요.

더불어서 구체적인 경제적 이해갈등은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 볼 때 나타나는 일시적인 착시현상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이 개성으로 옮겨가면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니냐 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지만, 사실은 그로 인한 연관 산업이 발전해서 몇 배의 새로운 일자리가 남쪽에 만들어진다는 점들을 잘 모름으로 해서 빚어지는 일종의 판단착오이지 이를 전체 운동의 진로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어떤 착오로까지 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승교 :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상과 이념 제도를 초월해야 한다는 것이 반드시 관철해야 될 당연한 명제라는 데 반대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자는 이 명제가 없으면 통일 자체가 불가능한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일하려면 결국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다만 김창현 총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쪽의 여러 가지 개혁, 변혁의 과제와 통일의 과제는 차원을 달리하면서도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지점에서는 민족적 대의, 민족적 요구 앞에 계급적 요구가 후퇴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글썄요... 노동자 농민의 계급적 요구를 너무 전면화하는 것은 민족적 대의, 민족적 요구를 후퇴시키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고요, 그 점은 노동자운동 농민운동 내에서 좀 더 연구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창현 : 만약에 우리 민노당 내 토론에서 계급적 요구를 조금 후퇴시켜서라도 민족주의를 앞세우자고 하면 아마 상당히 시끄러울 겁니다. 이렇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김종일 선생은 자본가들이 지금 이윤을 추구하고 있지 통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당연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자본가의 생리는 아무튼 이윤을 선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윤을 추구하는 일이라면 모든 제약과 조건을 없애자고 하는 게 신자유주의 철학이고 그런 의미에서 자본가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에 투자하는 행위도 그런 의미에서 뭔가 남기려고 하지 좋은 애국적 마음으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투자하겠다고 할 자본가는 남쪽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용납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러한 것이 결과적으로 북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남북의 교류가 오가고 자주적으로 통일을 시켜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 이윤추구 자체를 긍정적으로 봐 줄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상과 이념 제도 차이를 초월하자는 대명제에 있어서 그가 얼마나 선의의 뜻을 갖고 있는가, 이것저것 하나하나 따져서 자본가를 끌어안을 수는 없을 것이고 그의 행위가 그의 판단이 그리고 그가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궁극적으로 전체가 함께 통일로 가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여부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가 아까 계급적 모순은 차원이 다르다고 한 것은 근본적으로 민중들의 의식이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를 후퇴시키면서까지 민족문제를 우선 해결할 때만 궁극적으로 근본적 계급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식으로 성장해 있지 않은 조건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생존권에 관련된 요구 또는 빈부의 격차에서 발생하는 계급적 갈등을 투쟁으로 승화시켜내는 작업을 소홀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두 개의 차원을 좀 달리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경원 : 계급 노동계급의 민족주의가 가장 진보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노동계급이 민족문제 해결을 주도적으로 끌어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 부정하는 분은 없다고 생각되고, 노동계급이 어떻게 민족문제에 기여할 거냐를 고민하는 데 계급적 입장이 있다고 봅니다. 계급적 문제가 민족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고 확인되어 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른 한편 생존권 요구를 놓고 자본가와 싸우는 문제는 그 자체로 치열하게 싸워야 할 문제로 봐지지만, 다만 계급적 이익을 앞세워서 민족적 대의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문제가 구별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계급이 민족문제에 어떻게 협력할 거냐가 중요한데, 정주영 현대회장이 금강산에 가고 개성공단을 설치하고 하는 이런 문제는 남과 북에 다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남측에서 보면 현대라고 하는 자본가의 이윤추구 행위로 되는데 이런 것은 남과 북의 체제의 차이, 제도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지요. 그렇게 볼 때 여기서 제도의 차이를 인정하자는 것은 다 같이 민족적 입장에서 민족에 도움이 되면 적극적으로 해나가자는 거거든요. 그것이 남측의 제도적 차이 때문에 자본가한테 이익이 가더라도 민족적 이익에 도움이 되면 이걸 대단히 훌륭한 사업이라고 평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을 만들고 하는 사업은 민족적 견지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었다고 봅니다. 그것을 놓고 현대라고 하는 자본가가 북에 들어가서 사업으로만, 자본가의 횡포로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족문제와 계급문제에는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계급문제는 남쪽에 국한된 문제고 민족문제는 한반도 전체에 걸친 문제라는 점이고, 공통점이 있다면 민족문제인 분단도 미국에 의해서 초래된 것이고 남측의 계급문제도 실제로 미국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직접 경제지배를 하는 과정에서 촉발이 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분단에 의해서 남쪽이 직접 미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생기는 고통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냐, 할 때 그건 바로 노동자 민중들이라는 거죠. 문제는 민중들이 계급적 문제의 근원, 모순의 뿌리가 결국은 미국에 있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자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주체적 자각이 집단화되고 전체 조직적 차원에서 하나의 사상이론으로 자리잡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주체로 전환이 되는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전체 민족에 바람직한 통일의 방향으로, 민중이 중심에 서는 방향으로 통일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 진입 못하는 모습이 현재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김종일 :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면에서 지난 5년간에 걸쳐서 상당히 의식의 변화를 일으킨 건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에 특히 IMF 사태 이후에 그런 모순의 고리가 더욱 극명하게 바로 드러났다는 거죠. 우리 민족의 문제가 노동자 농민들을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민족적 자각, 대중적인 각성이 제고된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동권 내부에 완강하게 계급문제를 흐리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는 비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황 건 : 자주가 밥 먹여 주냐는 이야기도 있었지요?

김창현 : 그런 말은 지금은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에요.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진짜 선수들은 그런 소리 안합니다. 여전히 일반 대중의 각성도가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 워낙 극심하게 생활이 어려워져 가고 특히 비정규직이 8백만씩이나 늘어나고 하니까 그런 속에서 당면해서 당장 겪고 있는 극심한 빈곤 속에서 다들 귀찮다, 당면해서 눈앞에 보이는 자기 현실적 싸움에만 빠져들어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 싸움을 보다 격화시켜 내는 가운데 그들을 투쟁 속에서 각성시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운동의 다양성과 역량 분산

황 건 : 자주통일의 분위기가 대중들 간에 대세를 이룰 정도로 성숙하게 된 것은 6.15공동선언이 가져다 준 큰 성과라는 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통일운동 단체들이 수행한 혼신을 다한 헌신적인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의미에서 각 단체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을 돌아해보면 여러 통일운동 단체들은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큰 틀은 공유하면서도 구체적인 운동방식에서는 일정한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입니다. 예를 들어 미 대사관, 용산, 매향리, 평택 등지에서 반미집회에 전념하는 단체가 있고, 이라크파병 반대운동에 역량을 집중하는 단체도 있고, 민중연대에 비중을 두고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전망을 중시하는 단체, 국보법 반대에 치중하는 단체도 있단 말이지요. 또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경우 조약 폐기를 주장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조약 개정(또는 점진적 폐기)을 주장하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각 단체들 간에는 정세평가나 주요 현안문제의 인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나 때로는 분열이나 갈등 같은 것까지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 당혹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운동의 다양성은 긍정적인 면이 있고, 전술적으로나 역량 배치 면에서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다양성이 지나쳐 혼란으로 비쳐지기도 하고, 역량 배치를 논하기에 앞서 역량 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필칭 ‘자민통’ 또는 ‘민족민주’를 표방하고 있고 또 모두가 6.15공동선언의 실천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각 단체의 노선이나 목표, 정세관에 어떤 뉘앙스 차이 또는 어떤 기본적인 차별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겉으로 나타나는 각 단체의 차별성, 때로는 분열상으로 비춰지기도 하는 모습의 배경에는 인적 요인 등 그 밖에 다른 어떤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혹시 각 단체 간에 토론은커녕 언로마저도 막혀 있는 것이나 아닌지 하는 인상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다양성 또는 차별성, 역량분산 또는 분열상, 심지어 갈등으로까지 비춰지는 현상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러한 현상이 우리 운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시는지요?

이 질문은 문제제기 자체가 다소 도발적이고 논쟁적이기 때문에, 이런 공개적인 자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조직의 차원에서 보다 차분하고 진지하게 토론해서 풀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이해합니다. 그렇더라도 통일운동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 좌담회의 취지를 생각할 때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여 조심스럽게 질문하는 것인데요. 대중교양적 차원에서 될수록 부드러운 어조로 각 조직의 입장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일 : 저는 93년도에 서울연합 자통위원장을 하면서부터 통일운동을 10년 넘게 해왔는데요. 그 당시에는 통일운동의 전략적 목표 또는 과제가 뭐냐를 둘러싸고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쟁과제와 목표설정 등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요.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조직적 전망에 대한 이해를 달리 하다 보니까 94년도에 민족회의를 만든 적도 있었던 겁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통일운동 또는 변혁운동의 전략적 목표를 명확히 견지하는 문제에 부딪혀, 그것을 견지하지 못하고 수정하거나 훼손한 끝에 결국은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민간통일운동 진영에서 벗어나서 관변단체에 가 있거나 정치권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전술적 투쟁 고리를 잡아 가지고 풀어나갈 것이냐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연합을 정리하고 민간 통일운동 진영이 분열되면서 이걸 다시 통합시키고 어쨌든 민중중심의 통일운동이 서야 된다고 해서 자통협 활동을 하고 이어서 지금은 평통사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는 99년도부터 이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투쟁을 전면화해 나가지 않으면 전환적 국면이란 것은 선언적 구호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운동의 단계를 높이고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하는 데는 반미투쟁전선을 대중화시키는

게 관건이라고 봐서 99년도 소파 전면개정 운동을 필두로 해서 2000년 매향리 투쟁 등을 계속 전면화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통일운동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는 문제,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투쟁과제나 투쟁전술의 문제... 이런 데서 좀 편차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운동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다양한 계급계층별 전선도 분화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운동이 다양화하고 다양한 면에서 전개되고 있지만, 그러나 내부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선생님이 방금 문제를 제기하셨습니까만 자민통 노선을 견지하느냐 않느냐라는 문제에서부터 통일의 질곡이 되고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미국의 한반도 패권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광범위한 투쟁전선을 만들어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투쟁의 중심고리들을 시기별로 어떻게 설정해서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등의 문제에서 우리 자민통 민족민주운동진영 전체가 현재로는 통일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대위를 지난 2월 22일 130여 개 단체들로 만들고 그 계획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 4월 중에 전국의 다양한 반미투쟁 단위들을 다 묶어서 공동 워크숍 열어 올해 전반적인 투쟁들을 어떻게 확립시키고 투쟁의 계기들을 어떻게 만들고 역량을 어떻게 집중시켜 나갈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올해 민족자주운동의 전환적 국면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식을 통일시키려는 워크숍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저는 우리와 다양한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중간단체, 시민운동 단체들을 폭넓게 참여시키는 노력을 경주해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세길 : 희한한 현상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민통 또는 민족민주 내용은 같은 건데 자민통을 풀면 자주민주통일이죠. 또 자주민주통일을 풀면 당을 하나 만들고 민족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를 만들고 분단된 조국을 통일한다는 것으로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 6.15공동선언 이후 자주민주통일운동의 단결이 그야말로 소중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같은 내용을 ‘자주민주통일’이라 하면 어떤 운동단체, 또 줄여서 ‘자민통’하면 특별 정파로 딱 인식되어 버립니다. 내용은 같은 것인데 얼마만큼 줄여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지칭하는 대상은 전혀 달라져 버리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자주민주통일이 당면한 국민통일의 요구로 발전하면서 그 안에 있는 정치적 입장이 매우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대중화되면 될수록 입장이 다양화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이런 것을 단일한 위계질서에 통합하는 것은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상호 연대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게 더 필요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수십 정상 나뉠대로 민족민주 운동에 종사해온 사람들이 이러한 운동발전에 맞는 새로운 사고, 새로운 사업전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 적응하고 선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오히려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의 씨앗들이 곳곳에서 뿌려지고 그것이 계속 운동발전을 갉아먹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일단 봅니다.

특히 통일운동의 경우는 앞서도 나왔습니다만 사상 이념 제도의 차이를 떠나 전 민족이 단결해야 하는 마당에 운동진영 내의 차이를 아우르고 나아가서 그것을 큰 흐름 속에서 모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불성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창현 : 저도 한마디 덧붙인다면, 우리는 당내에서 일상적으로 다른 입장을 껴안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아주 온몸으로 늘 느끼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어떤 자그마한 사항 하나하나까지 토론해야 되고 또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설득하고 조율하고 조정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단결해서 하나로 가면 좋겠지만, 다양한 입장이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고 운동하는 데 힘들지 않다는 것도 몸으로 익히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운동을 쫓 해오신 분들간의 여러 가지 이견을 저는 심각한 문제로 보질 않죠. 특히 6.15남북공동선언 이후에는 민족적 강령이 생겼고, 그 이전에 민족회의가 생기면서 벌어진 분열의 경우는 사실 운동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처참하게 만들었다는 점에 비한다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할 거냐 하는 문제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도리어 허심탄회하게 풀어갈 근간은 이미 형성되어 있고 풀어갈 기준 잣대도 주어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도리어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각 단체가 내세우는 주도성이랄까 정통성과 관련 되었다고 봐요. 그러니깐 어느 정도 운동의 끝이 보이기 시작할 때일수록, 저는 통일에 궁극적으로 통일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많이 느끼고 사는데, 우리가 청춘을 다 바치고 또 열과 성을 다 바쳐서 성공의 모습을 노래로만 맨날 그날은 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날이 온다고 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가 진짜 이것을 만들었다, 제일 앞장서서 가장 고생했다 내지는 우리가 가장 옳았다는 정통성 주도성 대의명분 뭐 그런 것들을 각 단체들이 지나치게 앞세우기 시작하면 통일단결에 실질적으로 장애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단일한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넓은 틀에서 우리가 꿈꾸어 오던 제대로 된 거대한 통일전선체를 형성해서 거기에서 민족자주의 문제, 민족통일의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 정치세력화의 문제, 우리 내부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권위 있게 결정하고 함께 집행하는, 그런 근본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기본 축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경원 : 뭐랄까요. 90년대 이후에 우리가 다양성 또는 분열상황을 많이 겪으면서 지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핵심을 보면 저는 투쟁을 놓고서는 별로 분열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이라크투쟁 여중생투쟁 등을 놓고 분열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보고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조직에 대한 문제, 전선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변혁과 통일의 문제... 이런 데서 드러났던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민통, 민족자주 이런 표현을 쓴 이남 변혁운동에서 요구되어지는 자주민족통일이라는 것이 민족자주를 우선적 과제로 해결하고 계급적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고 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나타나는 것은 변혁과 통일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선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 관계는 어떻게 규명이 되어야 할 것이냐, 특히 6.15시대에 들어와서 연방제로, 낮은단계로부터 연방제로 통일돼 가는 경로가 실제로는 어떻게 밝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들에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생각의 차이, 이런 것이 이전에 형성되었던 조직적 구조 속에서 그런 전망을 나름대로 세워 놓고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여기서부터 생겨나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법이 있는 거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 실은 이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노선의 문제 또는 정세관에 대한 문제에서 비롯된 의견 차이를 극복해 나갈 방도는 아직까지 모아지지 않는 측면이 있고 특히 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는 오히려 각기 스스로 세워 놓은 방향에서 길을 쪽 따라가고 있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해결하여 통일단결로 나갈 건지가 과제라고 봅니다.

김승교 :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상대적으로 일반 대중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 편입니다. 총장님께는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민노당이라는 게 내부에 다양한 세력, 입장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덩어리로 한 배를 타고 한술밥을 먹으면서 한 살림을 살아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

은데, 그래서 새로운 진보정당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 같고요. 주위에 보면, 그래서 민노당에 들어갔더니 뭐 매일 싸움이더라 (웃음)... 그래서 오히려 염증을 느끼고 나오게 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통일운동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단체들이 많은지.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자기의 정치적 요구를 대변하고 대신해서 함께 풀어 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쉽게 찾을 수가 없다는 게 통일운동이 재미도 있고 인기도 있고 매력 있는 이런 걸로 전환하는 데 큰 장애가 되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든 큰 덩어리의 통일전선 조직을 반드시 시급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는 없겠지만 지금도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모든 단체들이 적어도 더 좀 전략적 필요를 자각하고 더 좀 본격화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최소한 가장 현실적인 경로, 방도가 일단 민중연대와 통일연대를 합쳐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제기를 하고 가능하면 노력하자, 현실적으로 전국적 차원, 중앙 차원에서 안 되면 지역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대로 만들어가 보자, 이런 방향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상당히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동선언이 있고 나서 5년 동안 객관적 정세, 국민들의 변화 요구와 지향은 아주 폭발하고 있는데 통일운동 하는 사람들이, 단체들이 그런 지향과 요구를 다 외면해 왔다면, 그것이 국민 대중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도 통일운동은 거북이가 되고 있는, 담보하고 있는 현실의 주요한 원인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원 : 지금 말씀하신 통일연대와 민중연대의 통합, 큰 덩어리의 전선체를 만들자고 하는 문제에 대해 저는 현실적으로 통일연대와 민중연대가 하나의 조직으로 합쳐질 수 있느냐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두 단체는 목표가 다르고 발생하게 된 과정도 다르고 구성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르게 보면 민족민주전선 그러니까 이남 변혁을 추구하는 민족민주전선과 조국통일 실현을 목표로 하는 범민족적 통일전선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당장 남북해외 공동준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통일연대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지역에서는 이미 통일연대조직이 있는 데도 공동준비위원회가 건설이 되면서 통일연대가 공동준비위원회로 전환돼서 폭넓게 구성이 되거나 이렇게 변화되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동준비위원회는 자체 지역 본부가 구성이 되는데 민중연대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공동준비위

원회와 민중연대가 통합할 수 있는 거냐, 통일연대와 공동준비위원회는 합치되거나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지역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것이 올해 특히 작년부터 올해에 이런 데서 드러났던 일련의 조직적 문제를 놓고 차이점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것이 남측에서는 통일연대와 민중연대의 통합이라는 문제로 나타나지만 전체 민족적 차원에서 보면 민족민주전선과 전민족통일전선 이 두 개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6.15시대에는 아까 계급문제보다 민족문제를 우선에 두고 풀어가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6.15시대에서의 현재 문제는 우선 범민족 통일전선으로 조국통일문제에 복무하는 과정으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민중연대는 이남 변혁운동에서 자기구현 역할이 있는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거기 복무해 나가는 방향에서 자기 활동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측면에서 통일연대와 민중연대를 합쳐 큰 하나의 전선체를 형성하자고 하는 문제는 전선체를 크게 형성해서 조국통일문제까지 확장, 자기역할을 확장시켜 나가려는 구상들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죠. 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형성된 전선이 지금 침체하게 발전해 나가는 정세를 쫓아갈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통일운동의 이념 문제

황 전 : 여기서 운동의 이념 문제를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운동의 분열상은 각기 이념이나 노선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념 문제를 너무 어물쩍 대충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념논쟁은 어느 나라, 어느 시기에나 있어 왔습니다. 팔레스타인, 남아프리카,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세계의 모든 발전도상국들에도 우리의 NL, PD 논쟁 같은 것이 있고 민족해방운동 내에도 이념논쟁, 노선투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0년대 초에 반제반봉건이라는 명제에서 “과연 지금도 봉건성이 남아 있느냐”를 놓고 벌인 논쟁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80년대에는 NL-PD 논쟁이 벌어져서 학계가 중심이 되어 NLPDR이라는 결론으로 미봉했었는데, 어쨌든 운동의 명제나 강령은 역사발전에 따라, 사회구성체의 변화에 따라 부단히 재검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가 세계화 신자유주의를 밀어붙

이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미국자본의 침탈로 나라 전체가 ‘경제특구’로 되어가고 있고, 다른 한편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 휘말려 있고, 6.15공동선언 이후 자주와 민족대단결의 요구가 최전면에 나서고 있는 지금에 와서는 종전에--아마도 80년대 말부터--우리가 갖고 있던 정세인식의 틀이나 이념, 노선, 강령 같은 것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민족과 계급문제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는 인식이 널리 보급되어 있는데... IMF 신탁통치 이후 외국자본의 침탈로 노동자, 농민, 서민이 구조적 빈곤에서 헤어날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참담한 질곡에서 벗어날 길은 민족의 자주를 되찾고 통일을 성취하는 데서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는 막연히 동전의 양면이라고 설명할 것이 아니라 민족문제가 ‘동전의 앞면’이라고까지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아까 이경원 처장께서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을 조국통일운동에서 요구되는 이념 문제로 제기하셨는데, 민족자주를 앞세우고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대단결”을 요구하는 6.15시대에도 과연 자민통 또는 민족민주라는 명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통시적으로 유효한 명제라고 보시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고, 또 예를 들어 이 좌담회의 다음 번 질문은 ‘통일애국세력’의 단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같은 표현에 동의하시시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6.15시대, 6.15통일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6.15 공동선언이 모든 사회변혁적 요소들을 다 향도하고 이끌어가는 국면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은 6.15시대라고 볼 때는 통일애국세력 또는 6.15선언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의 통일단결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뜻에서 앞에서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6.15공동선언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을 어떻게 규합하고 조국통일을 이뤄나갈 거냐 하는 문제는 현 시대의 가장 큰 화두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만 민족민주라는 측면에서 민족자주에는 두 가지 영역이 상존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냥 변혁적 측면에서 민족자주라고 하면 그것은 자주정권을 수립하는 형태에서의 민족자주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민통에서 우선적 과제로 민족자주를 실현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 또 조국통일에 있어서의 민족자주라고 하면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우리민족의 의사대로 결정해 간다고 하는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는 문제,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여타의 문제들을 척결해 가는 논리로서의 민족자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지금 6.15시대에 민족자

주라고 하면 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는 방향에서의 투쟁을 기본에 놓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 방향에서 통일애국세력이라고 할 때에는 기본노선에서의 통일성 같은 것을 지향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승교 : 명제가 유효한가에 관련해서는 여전히 유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근현대사에 달통하신 대가도 계시지만, 이것은 단순한 논쟁의 결과로서 정리된 게 아니라 수십 년 백여 년간에 걸쳐 우리 사회의 변혁운동의 최소한의 전략적 과제로서 도출된 개념이 아닌가 싶구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전략적 과제가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 이걸 통일적으로 파악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 중에 어느 한 부분을 우선시, 더 강조할 것인지에서 비롯된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의 과제를 아주 더 한층 발전시켜 사회주의적 과제까지도 내거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걸 통일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과제를 더 우선시 또는 더 강조할 것인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보고, 저는 당연히 이 문제를 통일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도 통일도 기초는 다 민족자주의 정신에 입각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자주에 기초한 민주화 그에 기초한 통일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지요.

박세길 : 과거 일제시대 때 독립군의 역사적 한계를 평가할 때, 독립한 후에 어떠한 사회상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함으로 해서 광범위한 민중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러한 문제의식이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자주의 기치 안에 전 민족 대단결을 실현하자는 얘기는 민족 구성원의 절대다수인 근로민중을 주인으로 세울 수 있을 때 가능한 얘기고 그것은 곧 그 계급적 요구를 실현하는 민족민주의 심오한 발전이 함께 결합될 때만이 가능하단 얘기죠.

그래서 자주민주통일 혹은 민족민주에서 민족문제와 민주적 과제는 절대 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야만 두 가지 문제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 점은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 더욱더 강조되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창원 : 저도 한 말씀드리면 이 고민을 저는 현실적으로 많이 합니다.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을 크게 군사패권 전략과 경제패권 전략이라고 보면 군사적으로야 우리가 일찌감치 남쪽이 강점되고 아직까지도 군전시작전지휘권도 환수하지 못한 채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태고 경제적으로는 사실상 IMF나 WTO 등을 통해서 아주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이 한반도에서 참 처절할 정도로 실현되고 있지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쌀시장개방은 빈곤을 극대화시키고 노동자 농민들의 생존권으로 아주 직결되는 문제로 발전해 왔다는 거죠.

이 속에서 민족자주 문제가 계급문제와 깊이 결합되어 있고 민족자주로 민족적 침탈, 패권전략을 벗어나지 못하면 계급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대중적 자각이 크게 확산된 것이 사실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동전의 양면이라는 문제로 본다면 여전히 양면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운동을 펼쳐야 된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것은 신자유주의가 전진하고 자본주의 발전이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의 빈곤화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데 물질적 토대가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좌파 동지들이 존재하고 또 앞으로도 그 논리는 계속 죽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논리라는 것이 그것을 양산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가 없으면 자기 스스로 동요하고 사라지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한국자본주의 안에서 그 논리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물질적 토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들과 함께 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때로는 이분들이 민족문제를 바라볼 때 계급문제를 풀어나가는 전술적 차원의 문제라고 보거나 혹은 과거보다 훨씬 더 전진해서 민족적 과제에 중첩되어 있고 함께 투쟁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보고 있는 수준이 분명하게 우리나라에 세력화되어 있다는 점을 보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족적 과제 통일된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내부에 있는 신자유주의 반대와 같은 계급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풀어나가는 것, 우리 내부에서 우리는 민족적 관점에서 국가보안법을 바라보지만 인권과 민주주의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과제를 중시 여기는 흐름이 상당한 토대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가 민족민주적 명제라고 표현했는데 더더욱 이 명제의 유효함, 특히나 통일 이후의 우리의 아까 발전된 사회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런 상,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보여줄 때 이런 민중들에게 계급적 모순이 해결된 새로운 사회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결합시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6.15시대에 이제는 통일이면 다 된다는 식으로는 사실 그들을 설득해 내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봐도 여전히 우리 자민통 민족민주적 명제라고 하는 것은 보다 좀 과거보다 선언적 의미보다는 훨씬 현실적이고 구체화시키고 정치학에 이것들을 결합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표현에 있어서는... 이걸 좀 재밌는 애긴데 표현문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민주노동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민족자주의 내용, 또 민주주의, 노동생존권 문제, 통일문제 다 제기하지만 유독 민족민주라는 표현이나 자민통이란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다 아실 거고 왜냐하면 아까 박세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일개 정파를 표현하거나 정파의 주장을 표현하는 단어로 훨씬 격하되어 있는 거죠. 전체가 다 함께 해야 할 과제인데 사실상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일들을 짧게 말하면 자주민족통일일 터이지만 그 표현을 굳이 안 쓴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서 생겨 나왔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자주민족통일이 소위 NL의 단어가 되었다면 이제는 전체 민중운동에게, 민족민중운동한테 돌려 주자는 차원으로 표현도 훨씬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원 : 한국사회 변혁적 과제에서 자민통은 자주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선차적 요구로 했고 저는 이 문제는 여전히 한국변혁운동에서 유효한 명제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현재 우리의 통일문제를 선변혁 후통일적 문제로 봐야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6.15공동선언에 따라 낮은단계 연방제와 연합제의 이점을 살려서 통일을 하자는 것은 현 시기에 통일문제를 어떤 경로를 거쳐서 실현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남측 정권을 장악하는 문제와 조국통일의 경로문제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6.15 시대에서 통일의 경로 문제는 이남 변혁을 완수한 뒤에 낮은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도 저는 민족대단결로... 사상과 체도를 초월해서 낮은단계 연방제로 진입할 수 있다고 보고, 주변환경 특히 미국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이 시기에도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는 이 통일 경로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도 표현했던 연방제 통일이라고 하는 높은 단계까지 가는 데는 시일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낮은단계로 진입해 가는 것은 이남의 변혁을 전제로 하진 않는다, 그거보다 훨씬 빨리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6.15시대 통일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실현해 나갈 것인지가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박세길 :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요, 분명하다고 봅니다. 남측에서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도 낮은단계 연방제는 실현가능하고 또한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남측에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이 지연되거나 극단적으

로 실종될 경우에는 낮은 단계 연방제는 높은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남의 연합제라고 표현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고착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15시대의 통일 경로는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고하되 높은 단계 연방제를 동시에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일적으로 접근하고 구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결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김종일 : 지금 6.15시대에 자민통, 민족민주 명제가 유효한가. 실제로 민중들이 전략적 과제의 실현투쟁에 오히려 전면적으로 나서야 하는 거거든요. 민족자주하려면 외세의 간섭과 지배, 특히 미국의 간섭과 지배를 벗어나야 하는데 그런 투쟁에 평택만 예를 들어 봐도 주민들이 완강하게 벌써 2년이 넘게 투쟁하면서 정부의 미군확장정책을 총체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주민의 투표 결과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 나서고 있고요. 뭐 민주과제도 그렇고 통일의 과제도 그렇고 전체 민중들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국면이기 때문에 민중들에 의한 자주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로서의 결집 정도에 따라서 과제를 실현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경원 : 한 말씀 더하자면, 저는 물론 이남 변혁에 대한 문제는 남측의 역량과의 상호연관 속에서 발전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로 진입할 때 그 안에서 계급적 문제가 어떻게 드높게 실현되어 나갈지를 대중들에게 인식시키고 또 그 방향에서 노력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낮은 단계 연방제로 진입해서 연합단계에 머무는 가능성은 별로 우려하지 않고, 오히려 낮은 단계 연방제로 진입하면서 이남 변혁운동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느냐 또 나갈 것이냐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 또는 합법칙성은 대단히 크고, 따라서 낮은 단계 연방제 단계에서 대단히 혁명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낮은 단계에 진입하고 그것을 이남의 변혁운동을 완수시켜 나가면서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가는 이런 단계로 충분히 우리 운동, 우리 민족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통일애국세력의 단합 및 확대강화 방안

황 건 : 그 문제는 추후에 또 토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일운동의 단합과 확대강화는 분단 60년을 맞는 우리 모두의 지대한 관심사이자 지상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일운동의 단합과 확대강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또 이를 극복할 중장기적 목표, 당면과제와 그 실천 방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공준위 출범에 따른 과제는 곧이어 따로 떼어 논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전반적인 통일운동의 과제를 염두에 두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일 : 어쨌든 통일운동의 단합 확대 강화는 북에 해당되는 얘기만은 아닌 것 같고 남측 문제가 결합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남측을 보면, 이번에 공준위 결성에서도 나타난 문제지만 남북해외 지역이 어디 있든 간에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이라면 다 단합을 실현해야만 그 힘으로 외세를 물리칠 수 있는데 공준위 결성과정에서 일부 민화협이나 종단 사람들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통일운동 본성에도 맞지 않고 또 통일운동을 발전시키고 남북 연대연합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모든 연대운동 중에서도 특히 통일운동은 여러 차원을 뛰어넘어 민족이 단합을 해야 하는 때니까 당연히 설령 차이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절대화되거나 중심이 될 수는 없고 공통이해를 중심으로 그런 부분들과 함께 단합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오히려 선각자들이 그런 유연함을, 적극적인 노력들을 견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본질적 이유가 뭘까? 저도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남쪽의 일부 세력들 간에 북에 대한 뭔가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한시바빠 극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의 앞에 자기 또는 자기집단의 이해를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복무할 수 있는 겸손한 자세들을 견지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측 어떤 세력이 전체 흐름들을 좀 더 주도해 보고자 하는 그런 당파적 이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는 연대연합이 안됩니다. 연대나 민족대단합에 있어서의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은 공통의 이익을 중심으로 우리가 복무시켜 나가는 관점으로 풀어나가는 것 이겠는데, 그런 면에서 이번에 통일연대의 많은 분들이 애쓰시는 것 같았지만, 그런 문제들은 뿌리가 있고 이게 하루아침에 극복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과정들에서 좀 더 적극성을 발휘하면서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승교 : 김종일 선생님께서 말씀한 북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한계와 편차 외에도 또 한편으로 이번 공준위 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그 문제만이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지적으로서 예컨대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나타나듯이 민족자주의 입장이 확고하지 못한, 철저하지 못한 이것이 양비론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대체적으로는 민화협 내의 일부 단체 인사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통일운동 진영 내에도 여전히 민족자주의 입장에 확고하지 못한 불철저한 자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전체적인 단합 확대 강화에 중요한 장애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울러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여러 단체에서 아까 말씀 나왔던 그런 큰 덩어리의 연대연합체, 통일전선체 결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지만 현실은 그 필요성에 대한 자각과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우리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공동선언 이후 정세가 급격히 변화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진영의 준비태세는 단적으로 쪼쪼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자각과 책임감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 나왔듯이 특히 노동자 농민들, 운동의 기본동력이 될 수밖에 없는 이분들이 좀 더 역사에 대한 책임감, 민족에 대한 책임감을 더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태도로는, 노동자 농민이 이 문제에 관련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전선체를 만들어도 큰 덩어리가 될 수 없고 설사 또 만들어도 힘있게 굴러갈 수 없겠지요. 참 아쉬운 게 지금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통일운동에 크게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고 있어요. 통일운동이 민주노총 전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기보다는 내부의 일부 구성, 예컨대 자통위원회의 부문사업 정도로 격하되어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노동자 농민이 제 역할을 해야만이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싶고 이와 관련해서도 민주노동당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도 강화되어야 되겠습니까마는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과정 자체가 민주노동당이 강화되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민노당이 큰 덩어리의 전선체를 형성하고 강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현 : 저는 아까 사실상 말씀을 다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입장이나 노선의 차이로 외화되어지긴 하지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각 단위마다 자신들의 주장이 가장 올바르다는 굳은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장이 유일하게 정통이고 그 외 주장들은 정통에서 벗어나 있다는 생각들이 사실상 자민통 운동을 하시는 분

들 내부에도 현실적으로 단위마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도를 아까 우리가 논의했지만, 이 문제는 ‘그래 너는 틀렸어’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밤새도록 이론적으로 토론을 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이미 분열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 분열해 본 경험은 달리 말한다면 이미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도 껌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6.15시대에 우리가 민족 앞에 죄짓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이제는 통일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주체가 준비 못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면 이건 천추의 한을 남기는 일이라는 절박감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정통하고 또 그 정통이 맞다 할지라도 차이를 뛰어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자기의 주의 주장의 목소리를 좀 낮출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큰 덩어리의 통일전선체는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전선체가 무슨 권위 있는 결정을 내려 봐야 다 같이 모여서 내릴 건데 그것이 100퍼센트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맞지 않더라도 함께 이루어진 결정은 함께 열심히 집행하는 풍토 속에서 훈련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민주노동당에서 보니까 하도 다른 분들이 많으니까 함께 결정하고 함께 집행하는 훈련을 몇 년째 하는데 여전히 시끄럽긴 하지만 조금 조금씩 돼 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의 거대한 통일전선체를 만들자는 것은, 우리 과거에 늘 아름다운 이상세계에선 그런 것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되는 것으로 봤는데 역으로 그것은 아름다운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을 모아서 우리가 우리의 권위를 만들어 간다는 개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런 의미에서 민주노동당이 해야 할 역할은 저는 뭐 당연히 크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소망은 그런 큰 통일전선체, 정말 안에서 사랑받고 지지받는 정치적 대표를 자임하고 나섰으면 참 좋겠다 이런 꿈도 갖고 있는 거죠.

박세길 : 단결 단합을 얘기할 때 결국 객관적 기준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신들의 주관적 경향이 있다고 해서 서로 다른 기준을 내세운다면 단결을 얘기하면 할수록 오히려 단결이 어려워지는 이러한 현상을 수도 없이 경험을 해 봤는데 저는 6.15시대 단결의 주체는 흔히 말하는 운동진영에 존재하는 단체라든가 그룹을 넘어서서 전 민족구성원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특히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앞서 여러분들이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한마디로 6.15공동선언이 담고 있는 객관적 기준이 있

다고 봐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민족끼리’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자주 민족대단결인데 그것을 좀 더 명료하게 얘기하면 북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거든요.

분명한 것은 이남 사회에는 북에 대한 입장과 태도로 정치사상 문제가 다 갈라집니다. 수구와 진보로 갈라지고, 진보 내에서도 소위 이런 부류 저런 부류로 나뉘고, 딱 북에 대한 입장 태도 하나로써 갈라지는데 6.15공동선언은 북에 대한 인정과 존중의 마음을 갖고 무조건 힘을 합쳐서 가야 한다고 하는 객관적 기준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어떤 사상과 경향에 의해서 북을 어떻게 볼 건가라고 하는 것은 이차적인 문제인 거고 이런 단결 객관적 기준에 무조건 자신을 북중시키고 대통합 대단결을 시도해 나간다는 새로운 각오를 갖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짚어서 얘기하자면 오랜 운동경력 속에서 각자가 학습을 통해 체계화한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을 텐데 그건 다 소중합니다만 이를 앞세워서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건 주관주의적인 한 경향성을 드러낸 것일 뿐 오히려 맞지 않다는 점들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원 : 아까 김창현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게 많이 공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직적 입장과 생각이 옳다고 느끼고 그 길로 쪽 가는 게 단합을 실행하는 데 대단히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단결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단합 단결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직적 단결이고, 조직적 단결이라면 전선 형태로 형성되어진다고 봐요.

90년대 초반에 범민련을 결성하고 전국연합을 결성했던 과정은 전선을 형성하고자 했던 거예요. 전 민족적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민중민주전선을 형성하는 문제였다고 보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대중운동조직 또는 세력들이 전선을 중심으로 안 되거든요. 이를 해결하려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국연합이 거기에 속한 사람들의 조직이 아니잖아요. 범민련이 지금 범민련을 끌어가는 사람들의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국연합은 새롭게 전선을 구축해 나가려고 하는 노선에 있다고 봐지는데, 민중연대를 민중민주전선으로 확고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노력... 이런 속에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범민족 통일전선이라는 틀에 전체 민족을 아우를 수 있는 조직적 단결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여러 과제, 문제들이 제기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전선을 중심으로 단결한다는 기본적 입장이 서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이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부합해 나가는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공준위’ 출범과 통일운동의 과제

황 건 : 마지막 주제입니다. 분단 50년, 6.15공동선언 5돌이 되는 2005년을 맞이하여 지난 3월 4일 금강산에서 남북해외의 3자 민간대표들이 모여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비록 짧은 준비기간과 특히 해외준비위를 둘러싼 잡음으로 다소의 곡절이 있었지만, 1990년 범민련 결성 15년 만에 또 하나의 상설적 3자 연대기구가 힘있게 탄생했다는 역사적 상징성은 그 같은 잡음을 덮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범민련 남측본부가 출범과 동시에 정부의 탄압을 겪어야 했던 데 반해, 이번 공준위는 출범 과정이 비교적 순탄하여 민족대단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적단체의 굴레에 매어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가 이번 공준위 결성 과정에서는 처음부터 실무대표를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범남의 활동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 통일운동에 합법공간이 넓혀질 것으로 예견된다고는 하지만, 합법공간이라는 것도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닌 이상 민간 통일운동에는 그만큼 더욱 무거운 과제가 주어졌다고도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준위 출범 이후 우리 통일운동의 당면한 과제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원 : 공준위에서 제가 협동사무처장을 맡고 있는데요, 여러 부문별로 공준위가 건설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6.15공동선언의 생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거 참 극복해야 할 과제가 너무도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준위가 출범하게 된 것은 지난 4년 동안 남북행사를 해오는 과정에서 이전의 추진본부가 드러냈던 한계를 극복하고 6.15공동선언에 동의하는 세력들을 최대한 규합하면서 일상적인 통일운동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준비위원회가 결성됐는데, 공준위에서 논의되는 사업을 보면 여전히 남측이 일상적으로 전개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제출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부에 편차가 대단히 심해요. 아주 다양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당면해서 보면 6.15공동선언 실천이라고 하는 방향, 남과 북의 힘을 잘 결합해서 조국통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 가야겠다 하는 방향에 있기는 한데, 그런데도 남북 사이의 대화를 바라보면 아직도 대결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북에 대한 발언 하나하나에서 또는 어떤 문제를 놓고 바라보는 데서 여전히 대결적인 발언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민족끼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서부터 민족의 단합을 놓고 민족의 이익 앞에 자기 조직이 복무해 나가야 하겠다는 자세 확립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공준위는 아직 규약도 없고 강령도 없고 다만 남북교류를 벌여 나가면서 3자연대의 통일운동기구로 되어가는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공준위가 자기역할을 해 나가려면 앞서 얘기했던 애국통일역량의 단결, 애국통일세력의 단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중심성 있게 끌고 가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측면에서 보면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여성 문예 학술 체육 이런 부문들이 저마다 남북 사이의 연대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대단히 발전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각 부문들이 남북연대조직을 상설화하고 연대를 이루어 가려고 한다는 것은 남북연대 운동이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문별 연대조직을 공준위가 담아내기 어렵다고 하는 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공준위가 발전되어가는 부문별 연대의 수준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부문조직들이 연대발전하면서 동시에 공준위가 올바르게 발전하여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공준위라고 하는 틀과 이것을 중심으로 끌어갈 범민련과 같은 조직의 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종일 : 공준위의 결성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6.15선언 이후 5년이 경과하면서 기왕에 폭넓게 형성되었던 다양한 통일운동의 흐름과 자주교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타개하는 데 사실 미흡했지요. 그동안 통일운동이 실제로 정세 요구에 맞는 흐름으로는 되지 못했고 그 다음에 개별 행사를 위한 한시적 기구를 만들어 오다가 이번에 민족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 등 3대공조를 위해 좀 더 상설된 3대 연대 기구를 폭넓게 형성한다는 조직적 발전의 요구에 기초해서 공준위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진 공준위가 그러면 그러한 기준에 맞는 실천투쟁 과

제들을 잘 수행해서 한반도에 전환적 국면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냐 했을 때 남측만 놓고 보더라도 구성상의 편차들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조금 더 정세에서 요구되는 정치 군사적 투쟁과제들을 실현해 나가는 방향에서 조금씩 조금씩 그런 흐름으로 전체를 주도해 나가야 하리라고 보고, 그래야만 공준위의 본래 결성 의의나 위상과 역할 이런 것이 역사적으로 자리매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세길 : 6.15공준위 출범의 의의는 일차적으로 남북의 상호연대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급하게 제기되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워낙 광범위하게 참여하다 보니까 방향성에서 일치가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주통일진영이 확고한 단결에 기초해서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과제는 6.15공준위는 어쨌든 외연이 매우 폭넓게 짜여 있는데 이런 조직 총량에 맞는 창조적인 사업구상이 나와야겠습니다. 한 예로 백두한라 민족통일전진이 일단 합의해서 추진중인데 일각에서는 만 명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고작 1만 명 참여하게 하려고 공준위를 만들었느냐, 한 백만 명 정도는 되어야지 약속한 전환적 국면이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비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6.15공준위 외연에 맞는 그런 대중 행동프로그램의 폭이 새롭게 제정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우리한테 던져지고 있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김승교 : 아까 김창현 사무총장님께서 낮은단계 연방제 또는 통일이 다가와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저는 6.15공준위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쪽에서는 아주 이걸 광범위하게 구성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부위원장도 참여하고 있고 정당 대부분의 사회단체를 다 망라하는 쪽으로 구성했는데, 여기서 북에서는 어쨌든 공준위에 대해서 아주 커다란 의의, 적극적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낮은단계 연방제에 만약에 진입한다면 가장 먼저 구성될 게 아마 통일의회, 통일국회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6.15공준위가 그 조직적 기초 또는 정치적 기초로서 능히 역할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6.15공준위가 외연이 많이 확대되어 있다지만 사실은 그에 걸맞은 통일의회 통일국회 낮은단계 연방제까지를 사고에 둔다면 지금의 외연도 그리

넓은 게 아니지 않는가, 이 외연을 더 확장하는 문제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한 편 꺾이기 포장만 이렇게 키우는 게 중요한 건 사실은 아니니까 사업내용을 알차게 풍부하게 만들어가야 하겠고, 그러자면 통일운동 진영이 전반적으로 단합 확대 강화되어 제 역할을 하면서 지도력을 발휘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김창현 : 그간 범민련의 많은 선생님들과 동지들이 3자연대를 부르짖고 또 갖은 고초를 다 겪으면서도 그 깃발을 소중히 여기셨는데 여러 통일단체들이 고생하셨지만 저는 공준위에는 그러한 성과도 충분히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단 이후, 해방 이후에 가장 폭넓게 남북해외의 각계층 또 정당 사회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게 굉장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더욱이 방금 김승교 선생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것이 민족통일 기구를 준비해 들어가는 민족적 상설적 통일기구의 토대를--이게 뭐 모태라고 표현할 순 없을 것 같구요--그런 조직적 토대를 어떻게 구축해 가야 하는가도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그 의의에 걸맞은 활동도 펼칠 때만이 그런 의의도 살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크게 만들어서 큰 교류사업 한다는 생각에만 머무른다면 정말 지난 5년 동안 반성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게 되겠지요. 대규모 교류사업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그걸 해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하고 긴장을 완화시켜 내기 위한 노력을 실제로 벌여내고, 전 민족적으로 6.15선언을 엄호하고 지지하여 이를 전체 민족의 과제로 끌어내고, 미국의 한반도 전쟁책동을 실제로 광범위하게 반대해 내고, 그래서 뭐라 할까 대세를 전면화시켜 내는 그런 사업을 벌여나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미 대세는 잡혔다고 보는데, 이를 전면화시켜서 실제로 통일을 준비해 들어가는 조직적 토대를 이제부터 구축해 보자 하는 그 정도의 큰 목표를 가지고 덤벼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지금 준비는 그런 의미에서 취약하긴 하지만 그런 의의를 살려야 한다는 과제가 우리에게 제기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황 건 : 시간제약 때문에 아쉽지만 여기서 좌담회를 마쳐야 하겠습니다. 장시간 토론에 임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사회를 보는 동안 본의 아니게 주제넘은 발언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좌담회에서 합의 도출된 실천적 방안이라든가 뚜렷한 결론이라 할 만한 것

은 별로 없는데요, 그렇지만 민간 통일운동의 당면한 장애요인들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나 이를 극복하려는 실천적 의지는 충분히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5년 우리 회가 “민간통일운동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을 때도 딱 부러지는 결론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 좌담회에서 나온 발언들이 거름이 되어 ‘범민련 해소론’이 수그러들고 민간 통일운동이 민족회의와 범남 두 경로로 진행되다가 점차 범남으로 수렴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오늘 좌담회는 토론 내용도 큰 의미가 있지만, 각 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자리가 앞으로도 여러 형태로 마련되어 통일운동의 단합과 발전을 촉진하는 촉매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